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채란산업 안정, 생산자들이 지키자 의무자조금 사업 조기 정착에 역량을

금년 채란업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업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수수 유지를 통한 과잉생산 방지와 소비 활성화를 통한 산란업계의 소득 증대에 있다. 이를 위해 채란인 및 업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초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산란 종계업계에서 제시한 쿼터제에 대해 채란인들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란업계의 숙원사업인 채란계 의무자조금 사업도 종계업계에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개 종계농장 대표자들은 채란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산란종계 쿼터량을 41만2천수로 묶자는데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41만8천수 보다 적은 물량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도에는 신규 종계장에서 2개 품종(백색, 갈색)이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42만8,670수로 쿼터량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종계업자들이 합의를 이뤄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란실용계 생산수수는 지난해 5천7백만수를 넘어 쿼터량 조절 노력에 부합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채란인들은 지난 채란분과위원회를 통해 쿼터제의 당위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종계인들과의 입장차이를 보였다. 채란인들은 쿼터제의 취지는 종계업계와 산란업계 등 전 채란업계가 윈윈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병아리가격이 생산비 이상의 고가로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은 불합리하며, 쿼터제로 인해 오히려 병아리 품질 저하현상과 환우증가 등으로 인한 계란품질 저하 현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쿼터제를 종계장들의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란계 자조금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관심이 높았던 사료회사에서의 자조금 거출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부화장에서의 거출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가운데 종계·부화업계에서 자조금 수납기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정식 통보하면서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한지붕 아래 밀고 당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미 한미 FTA 6차 협상이 끝나면서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협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등 외부여건도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계업계 대표자와 채란업계 대표자들이 조만간 만남을 갖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가운 것은 채란계 의무자조금사업의 정착을 위해 부화장에서 거출여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채란업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발전을 위해 채란인들도 스스로가 우선 100주령제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입식수수 감축 운동에 참여하여 불황을 예방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며, 종계·부화업계는 자조금 사업은 물론 양계산업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한미 FTA 협정 선언 1년

피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노력

정부가 지난해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한지 1년째를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해 6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협상을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된 협상이 지난 1월(15-19일) 6차협상까지 숨가쁘게 이루어 졌다. 국내 축산업계를 비롯한 농업계는 한미 FTA협상에 대해 원천 반대입장을 밝히며 국내 농업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의회의 규정상 미의회 통과를 받는 절차인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일정(TPA 2007년 7월 1일 종료)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의회검토키간인 90일 전인 3-4월까지는 협상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5차까지 밀그림이 그려진 만큼 이번 6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일부 수산물, 임산물 포함)에서 총 1,531개 품목을 가지고 농업분과에서 협상을 벌여왔으며, 양계분야는 닭고기 24개 품목(닭다리 냉동 등), 계란 8개 품목(난황 기타 등)으로 총 32개 품목을 협상대상으로 조율을 해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국측은 양허제외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양계산물의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 5년, 7년, 10년의 양허안을 제안해 왔으며, 우리측은 10년, 15년, 미정(undefined)의 양허안을 제안하면서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많았던 닭다리(냉동)를 비롯한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에 대해 민감품목으로 규정하고 미정(undefined)에 분류하여 협상을 벌여왔으며, 계란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많았던 난황(기타)의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행 41.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조란(계란 원란)에 대해서는 역시 민감품목으로 규정하여 협상을 벌여 왔다. 미국측은 이러한 품목에 대해 닭고기는 즉시철폐를 계란은 즉시철폐 또는 10년유예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종착역으로 다다를 것이며, 양계분야에서도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쫓기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양계업계를 비롯한 전 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가져

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는 우선적으로 국가 이익의 극대화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축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양계분야 축산발전기금 어떻게 쓰이나?

양계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재고 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은 그동안 축산업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축발기금의 설치 배경은 지난 1974년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처음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기금 재원은 정부보조금 또는 출연금, 축산물수입 이익금, 한국마사회 납입금, 소싸움경기출연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에서 출원되고 있다. 매년 축발기금의 규모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4천2백여억원의 축발기금이 사용되었으나 지난 2006년도의 예산액은 약 2천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축발기금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개량 등 축산발전에 사용되어져오고 있으나 이마저도 이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자체 등의 몫으로 떠맡겨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양계인들은 정부의 지원이 양계분야에 타 축종보다 낮게 책정되어 양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06년도 축발기금 예산안 중 본회가 조사한 양계업계의 지원 비율은 순수 양계분야에만 1%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도 축발기금 예산중 축종별로 비교해 보면 젓소가 34%로 가장 많고, 한우(22%), 양돈(3%), 닭(1%), 공통부분(39%)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양계분야의 지원이 4%에 해당되었으나 2006년에는 그보다 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양계인들은 축발기금이 순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함에도 한국산 닭고기 일본식육전문지 광고, 수출용 닭고기 생산농가 및 업체 기술교육 세미나, 일본시찰 등 육가공기술정보 등 삼계탕 판촉홍보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면을 보더라도 축발기금의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양계업계에서도 우리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 대책을 필요에 맞게 주장하고 요청을 해야 한다. 다른 축종으로 자금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양계분야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졌거나 요구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아이 젓주기' 식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양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양계인들도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검토하고 분석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양계**